

# “전북 자동차산업 ‘친환경’ 주력”

도의회 친환경자동차연구회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돼

“양방향 연결·자율주행 등 커다란 기술변화 보여” 자동차산업 흐름 소개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친환경자동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관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도의회 친환경자동차연구회(대표의원 오영근) 주관으로, 의회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 자동차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 미래자동차 개발을 놓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자동차융합기술원 사정환 본부장은 “친환경자동차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신시장 개척과 함께 관련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전북 규제자유특구”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특구”는 LNG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등의 실증특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해 친환경연료로 산



지난 11일 전북도의회 친환경자동차연구회 주관으로, 의회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 자동차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 미래자동차 개발을 놓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업적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사정환 본부장은 “LNG상용차의 배출 가스는 미세먼지 99% 저감을 통해 8천억원의 사회적비용 절감효과가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통해 5년동안 1조 7천억원 이상의 매출과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본부장은 친환경 미래자동차 개발을 위해 전기트럭과 버스용 가변 플랫폼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노 본부장은 “최근 자동차산업은 양

방향연결과 자율주행, 차량공유와 서비스, 완전 자동차 등에서 커다란 기술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지능화되고 진동화되는 자동차산업의 흐름을 소개했다.

노 본부장에 따르면, 글로벌 소형 상용전기차는 짧은 운행거리와 저속운행, 빈번한 정차와 차량 노후화,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경유차량의 단점을 개선해 환경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경제성과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장점을 가졌다는 설명이다.

세미나를 마친 오영근 의원은 “전

세계가 앞으로 10~20년 안에 내연기관의 신차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면서 “이는 친환경자동차의 개발을 더는 늦출 수 없고 가속페달을 더욱 세게 밟아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 친환경자동차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발족한 스터디그룹인 친환경자동차연구회는 지난 1월에 발족해 오영근 대표의원과 김정수 연구책임자를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완주, 교통 허브 날개 달다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4차로 확장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SOC 4개 사업 국비확보

6개의 IC를 갖고 있는 사릉팔달 도시 완주군이 SOC 국비 확보로 교통 허브망 구축에 날개를 달았다.

지난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4차로 확장, 위험도로 구조개선(2개 사업),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IC 확장 등 기간 도로망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 도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완주군은 내년에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전용농공단지, 삼봉 웰빙시티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번에 확정된 SOC 사업 추진을 통한 광역 및 생활권 연계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교통편의가 향상되고 향후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유치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은 구이~이서~용정~용진 구간을 준공 완료하고 전체 54.5km 중 마지막 구간인 용진~우아 구간 9.9km를 건설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기존 왕복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었지만 2차선으로는 현재의 교통난 및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차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동안 경제성이 확보되는 완주 구간과는 달리 전주 구간의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해 확장공사 추

진이 불확실하였으나, 전·현직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과 김윤덕 의원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북도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부처를 설득한 끝에 11월에 극적으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 4차로 전면개설 추진을 이뤄냈다.

완주군은 소양 소재지 진입로 개설사업과 운주 장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국비 확보에도 성공해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성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양 소재지 진입로 개설은 소양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소양면 소재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온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주 장선지구 위험도로 개선은 선형개량 및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함으로써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본 사업들은 총사업비가 각각 30억씩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 실시계획을 완료해 20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더불어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IC 4차로에서 6차로 확장공사도 추진한다. 지난 9월 기재부(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기본설계를 위한 내년도 사업비 3억원이 반영돼 18.3km 구간에 걸쳐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 “총기 박물관 조성 관광자원화를”

박용근 도의원 주장

완주군에 동학농민혁명의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총기·총포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 총·포를 제작할 수 있었던 국가는 지배의 역사를 누리게 됐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다”며 “국내 최초로 ‘총기·총포’가 특화된 박물관을 설립해 관광자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전북도가 봉건 체제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 자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최초의 농민 중심의 혁명인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었다”며 “삼례의 경우 두 차례의 무장봉기와 함께 민간인(농민)은



연계한다면 불거리 측면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완주군내 폐교부지를 활용하고, 군사학과·경찰행정학과가 설치돼 있는 우석대, 원광대 등 대학들과 박물관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총기제작 기업이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어 전시품 제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원색명화마을 환경개선 기여 양영환 전주시의원, 감사패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 1·2동)이 지난 11일 완산구 색장동에 소재한 원색명화마을(대표 박찬섭)로부터 지역사회 발전 및 원색명화마을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찬섭 대표는 “양 의원이 평소 다른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왔으며, 특히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원색명화마을의 낙후된 마을 주거환경 및 문화시설 개선 추진 등 환경개선 지원에 기여해 그 공로로 주민들의 감사한 마음과 정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익산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로 지방자치 실현 한 발짝 더 다가”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지난 11일 지방 의회 인사권 확보, 전문인력 도입,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주민의 자치 참여 보장 및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성이 강화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개발 등에 있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구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지방의회가 주도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펼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영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